

“경찰 압수수색... 양심 걸고 임하겠다”

민주 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 협조 의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 이원택 의원의 지역 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이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도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실제적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향후 수사 대응과 관련해 네 가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소명하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회피나 지연 없이 투명하게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특히 객관적 검증 수단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CCTV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며 “이번 수사가 각종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다양한 의견과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과정”이라면서도 “모든 주장과 비판은 사실과 균형을 기해야 하며, 근거 없는 추측이나 단정적인 비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은 객관적 조사와 증거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당원들을 향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심을 걸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편적인 정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 주시며,

진실 규명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수사당국 역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결국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택 의원과 김승재 도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01만호기자



압수수색 마친 경찰관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승재 의원을 찾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관들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식비 대납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장례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음)

“도민은 빛내 버티는데 행정은 어디에?”

백승재 도지사 예비후보, 2600억 긴급 추경 제안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백승재 후보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없이 26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백 후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로 도민들이 사실상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도민들은 빛내 버티고 있는데 행정은 재원이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부처 대규모 민생 추경을 편성했지만, 전북도 차원의 대응은 체감도가 낮다”며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그는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보충교부세와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면 도와 14개 시군이 각각 1,300억 원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는 확보 재원을 활용한 민생온도 UP 4대 정책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전 도민 1인당 1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농어민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 환급률 최대 50% 확대 △화물·택시·택배 종사자 유류비 추가 지원 등이다.

백 후보는 “예산은 도민이 가장 어려워할 때 쓰여야 한다”며 “민생에는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백승재 후보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없이 26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나경이 없는 만큼 전북도가 결단하면 즉각적인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1만호기자

도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선거 행보 본격

“듣고 답하는 소통 정치 실현”

임승식 도의원 예비후보, 17일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후보(정읍시 제1선거구)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임 후보는 오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정읍시 연지동 중앙로 26-2(조한의원 3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을 초청해 후보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후보는 “듣고 답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

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북지환경위문장으로 활동하며 농업·복지·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정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01만호기자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정치 실현”

이보순 전주시의원 예비후보, 18일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보순 전주시의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이 후보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 기린대로 528, 3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을 초청해 후보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후보는 “귀한 걸음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된다”며 “오가시며 편하게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열린 개소식 형

태로 진행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당일에는 인근 덕진교회 주차장이 이용 가능해 방문 편의도 고려했다.

이보순 예비후보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전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지역발전 이끌 책임자

군산지역 축구인들, 김영일

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군산시 축구인들이 김영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군산시축구협회와 군산시 축구인 일동은 15일 선언문을 통해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축구장 및 축구센터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지키고 사수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상호 협력과 단합을 바탕으로 군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시장 후보 지지 선언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재심 존중, 재감찰 반드시”

민주 안호영 의원, 당 지도부에 전면 재조사 촉구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경선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전면 재감찰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회를 향해 “윤리감찰단의 전면 재감찰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후보에게 1%p 차로 패배한 이후,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해 이날로 5일째를 맞고 있다.

안 의원은 “당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절차상 존중하겠다”면서도 “재심 과정에서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초 감찰 과정에 대해 “축박한 시간이라는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끝난 졸속 절차였다”며 “그 결과 특정 후보에게 ‘힘의 없음’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이는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다른 사안에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당내 ‘이중 잣대’ 논란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특정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의 공정성에 대한 도민과 당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자 진술서 제출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심위원장 역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재감찰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심 결과는 존중하지만 재감찰 요구는 철회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증거와 진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역할’을 넘어서 민주당이 공정한 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의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전북도지사 경선 결과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 지도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01만호기자

“완주 대전환 위해 정책연대 결단”

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 이돈승 예비후보 공식 지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구도가 막판 결집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과의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선 가운데, 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가 이돈승 예비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유혜태 예비후보 간 결선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돈승 예비후보와 서남용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대전환을 위한 선택으로 이돈승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결선 투표에서 반드시 이돈승 예비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돈승 예비후보와 서남용 예비후보가 지지하는 70여 명이 넘는 지지자가 함께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진행되었다.

두 예비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내려놓고 오직 완주 발전을 위해 정책연대를 결단했다”며 “이돈승 예비후보 지지 선언은 완주 대전환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용 예비후보는 “지금 완주는 정체된 흐름을 바꾸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있다”며 “이돈승 후보는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가 된 후보”라고 평가했



다. 이어 “지금부터는 분열이 아닌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완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규 예비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돈승 예비후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책연대 정신을 살려 함께하겠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이돈승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돈승 예비후보 측은 정책연대의 실질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전날 3차 회동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대표공약 2개씩을 이돈승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해당 공약은 원 제안자의 이름으로 완주군수 당선 후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는 등 명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투표는 유혜태 예비후보와 이돈승 예비후보 간에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관리당원 ARS 방식으로 진행된 예정이다. 이번 지지 선언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01만호기자

“주민 제안·불법비리 접수센터 운영”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유기상 예비후보가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정선거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유 후보는 15일 “지난 11일 중앙당에 제안한 ‘정곡지체 불법비리 조사특위’와 ‘공명선거 캠페인’과 연계해 ‘주민제안·불법비리 접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고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은 물론 불법 비리 및 선거 부정 사례 등을 접수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 대상은 △발전을 위한 주민 제안 △군정 관련 불법 비리 △선거 과정에서 부정 사례 등이며, 유 후보는 이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01만호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한 의 민간 이양 △주민 참여형 정책 결정 △복지·문화단체 자율성 확대 △군민 축제 운영권 민간 이양 △행정 조직 개방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비리와 선거 부정 근절을 위한 감시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제안·불법비리 접수센터’는 오는 2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고창군민 누구나 전화(063-562-0008)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01만호기자 · 고창=김영식기자